

기고



김성중
작가·추리문학관관장

일본 적군과, 독일의 대명사 바더 마인호프, 이탈리아의 붉은 여단은 모두 60,70년대에 악명을 떨쳤던 좌파 테러단체들이다. 그러나 좌파 테러단체들은 70년대를 고비로 공산주의 몰락과 함께 소멸되고 대신 새로운 강력한 힘을 가진 테러단이 등장했다. 바로 이슬람 무장세력의 테러단체다.

이슬람 테러의 상대는 처음에는 이스라엘이었지만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지금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방 세계이고, 문명 충돌의 양상까지 띄고 있다. 이슬람 테러의 가장 추악적인 신호탄은 1972년 9월5일에 발생한 뮌헨올림픽 테러다.

그날 새벽 팔레스타인 '검은 9월단' 소속의 무장파괴원들은 이스라엘 선수촌을 습격, 이스라엘 선수 11명을 살해한다. 골다 메이 어여수상은 이스라엘 정보부인 모사드에게 전세계를 뒤흔쳐서라도 테러분자들을 색출하

테러리즘

여 처단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때부터 모사드는 20년에 걸쳐 반복작전을 수행, 테러분자들을 모두 암살한다.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차이는 무엇보다도 표현의 자유에서 비롯된다. 기독교 문명은 과거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신성 모독과 같은 개념을 상실, 비판에 익숙해지고 너그러운 반면 이슬람은 신성 모독을 금기시하고, 단호하게 응징한다.

영국 작가 셸먼 루시디가 소설 '악마의 시'에서 마호메트를 풍자하며 코란을 악마의 계시라고 썼다가 호메이니의 명령으로 목에 100만 달러의 현상금이 내걸린 채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닌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네덜란드 영화감독 테오 반 고흐(인상과 화가 반 고흐의 동생 테오의 증손자)는 이슬람의 여성 차별을 비판한 영화 '굴종'을 제작했다가 앙스테르담 거리에서 자전거를 탄채로 총에 맞아 죽었다.

갈수록 격렬해지던 이슬람 테러는 급기야 2001년 9월11일 뉴욕의 세계무역센터를 공격함으로써 그 정점에 이른다.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9·11테러는 사망자만 3000여명에 이른 대참극이었는데, 알카에다의 예초 계획은 10대의 비행기를 납치해서 태평양 상공에서 폭파하는 것이었다.

그 중에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9·11

테러를 감행한 19명의 테러리스트들은 대부분이 함부르그 공대 출신들로 독일에서 낳고 자랐다. 그들은 왜 테러리스트가 되었을까?

이슬람 테러와 미국과의 관계는 2차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군이 침공해오자 스탈린은 소련연방 내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출신 이슬람 청년 수백만 명을 징집, 총일방이로 대대독선에 내보낸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독일군의 포로가 되고, 나치의 설득에 소련 군복을 벗고 이반에는 독일군이 되어 소련군에게 총부리를 겨눈다.

그리고 종전이 되자 그들은 연합군의 포로가 되어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소련은 회교도 포로들을 반역자로 처단할 준비를 해놓고 당장 돌려보내라고 독촉한다. 오갈 데 없이 국제 미아가 된 포로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그들을 받아준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였다.

소련과의 냉전이 시작될 것을 예견한 미국은 그 포로들을 냉전에 이용하기 위해 소련에 돌려보내지 않고 대부분 독일에 정착시킨다. 그들은 러시아어에 정통하고 소련에 관한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재 독일에는 400만 명의 이슬람 교도가 거주하고 있는데, 9·11테러의 범인들은 2차대전 당시 포로로 붙잡혔다가 독일

정착한 이슬람 교도들의 후손인 셈이다.

미국이 소련과의 냉전에서 이슬람 교도들을 심본 이용한 곳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때였다. 베트남 전쟁에서 지칠 대로 지친 미국은 더 이상 아프가니스탄 전장에 직접 개입할 여력이 없었고, 그래서 대신 이슬람 교도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첨단 무기들을 지원했다. 그들을 아프가니스탄 전장에 투입시켰다.

CIA가 당시 뉴욕에서 이슬람 율법들을 모집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CIA가 훈련시키고 지원한 이슬람 교도들은 무자헤딘(성스러운 이슬람 전사)으로 단련되어 아프가니스탄 전장에서 소련군과 맞서 싸웠고, 결국 소련은 10년 동안 고전하다가 아프카니스탄에서 패퇴하고 만다. 그리고 10년이 흘러 그 자리에 이반에는 미군이 들어온다.

9·11테러 직후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이 숨어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고, 그들을 맞이한 것은 그들이 훈련시키고 지원했던 무자헤딘들이었다. 과거의 동지가 이제는 적이 되어 서로 총부리를 겨누게 된 것이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은 이제 전세계에서 무자헤딘의 테러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입장이다. 역사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무래도 신만이 아는 것일까.

社說

민주당 새지도부 이제 환골탈태 뿐이다

민주당이 4일 정기 전당대회에서 김한길 대표 체제를 출범시켰다. 김 대표와 함께 임기 2년의 지도부를 이룰 최고위원에는 신경민, 조정래, 양승조, 우원식 후보가 뽑혔다.

하지만 새 지도부가 헤쳐나가기 할 정 처헌실은 그야말로 압축하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 그리고 4월 재·보선에 이르기까지 연전연패의 수렁에 빠진 민주당을 어떻게 건져낼지 그 과제는 한 울타리 아니다. 무엇보다 당내 계파간의 갈등을 수습하는 일이 최대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대선의 화두로 떠올랐던 '세정치'와 혁신은 미완의 과제가 된지 오래다. 겨우 내놓은 게 대선평가보고서라지만 패배 책임 여부를 놓고 후폭풍이 거셴다. 이번 전당대회 역시 계파싸움으로 전락한 '그들만의 리그'였을 뿐이다.

민주당의 뒷발이라는 호남지역 인사들이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에 한 명도 입성하지 못하면서 예상되는 호남민심 이반도 간담치만은 얹아 보인다. 여

의도에 입성한 안철수 의원이 독자세력화 가능성을 키우며 제1야당인 민주당의 위상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남지역에선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의 지도도가 민주당을 앞서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권보다 더한 인사 차별을 해도 성명서 한 장 내지 않았던 것이 민주당이다. 지금도 호남이 박탈감에 해고고 있지만 그에 부응하러는 어떠한 시도도 찾지 못했다. 민주당에 대한 국민과 호남민들의 거부는 자업자득이자 현 상태로만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분명하다.

이제 민주당은 의석 127석의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구태 정치를 걷어내고, 당을 밑바닥에서부터 개혁과 쇠신에 나서야 한다. 이는 계파정치 청산이 그 전제가 돼야 한다. 간판을 내릴 각오로 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호남이 먼저 나설 것이다.

무상보육 중단 위기, 재원대책 서둘러라

전국적으로 올 하반기에 보육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이 시행 5개월여 만에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전남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의 관련예산이 9월을 못 넘기고 바다에 나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1월부터 0~5세에 대한 무상보육이 시행돼 어린 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으면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육예산을 분담하는 상황에서 광주시의 관련 예산은 지난해 1954억 원에서 올해 2440억 원으로 486억원이 늘어났다. 전남도도 지난해 905억 원이 증가한 285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미확보 예산은 광주시 432억 원, 전남도가 270억 원에 이른다. 전국 지자체의 상황도 다르지 않아 모두가 아우성이다.

하지만 해법은 단순하다. 결국 예산의 문제다.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은 무상보육의 국비 지원 확대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비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으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개월째 계류 중이다.

국회, 정부 모두 법 개정 의지가 있는 지 의문이 들 정도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있다. 사실 무상보육 시행 초기부터 이런 사태는 예견됐었다. 추가재원 대책 마련없이 무리하게 시행되면서 복지포플리즘이라는 비판 여론이 불끓었다.

이제 무상보육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우선은 조만간 다칠 보육대란부터 막아야 한다. 계류 중인 영아보육법 개정안을 처리하거나 당정이 추가재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근본적인 정책수정은 그다음의 문제다.

법조칼럼



강애란
광주지법 제3민사부 판사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송기석)가 지난 30일 오전 재판을 광주지방법원 법정이 아닌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모의법정에서 진행했다. 공감과 소통이 시대의 중요한 흐름인 상황에서 사법부는 국민에 대한 신뢰회복과 원활한 소통,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골마을이나 사건 현장에 직접 찾아가 재판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법정'을 시도하고 있다. 광주지법에서도 이러한 사법부의 노력에 부응하고 실무교육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전남대 로스쿨에 찾아가 앞으로 법조계를 이끌어갈 예비 법조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을 진행한 것이다.

관사인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재판은 당연히 법정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법정이 아닌 공간에서 재판

‘캠퍼스 열린 법정’을 마치고

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 신신하고 법원이 친밀하게 느껴진다는 반응이었고, '찾아가는 법정'의 법적 근거를 궁금해 하기도 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개정의 장소에 대해 "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로스쿨 등에서의 법정 개정이 가능하게 돼 있다.

예비 법조인들에게 재판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설레는 마음과 실무교육을 지원하는 뜻 깊은 자리가기에 재판부도 미리 원·피고 소송대리인들과 의견교환 및 쟁점정리를 했고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해 사안의 쟁점과 관련 법리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필자는 전남대 법대를 졸업해 10여년 만에 모교에 찾아가게 돼 감회가 새로웠고 교수님들과 후배들 앞에서 재판 실무를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이었다.

로스쿨 학생들은 실제 재판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호기심에 찬 눈빛으로 재판부를 응시하고 소송대리인들의 주장과 반박을 진지하고 주의 깊게 듣는 모습이었다. '찾아가는 법정'에서 진행된 사건의 쟁점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였는데, 사안이 조금 어려워져 흥미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했으나 재판과정을 지켜 본 학생들은 "법정지상권에 대해 평소 어렵게 생각했었는데

재판 진행과정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쌍방 대리인들의 주장과 반박을 지켜보면서 강의를 통해 배운 이론이 실제 법정에서는 어떠한 과정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돼 교육적 효과도 매우 높은 것으로 느껴졌다.

이번 재판은 관련 법리, 사안의 개요, 당사자의 주장, 쟁점 설명, 증인신문 등 증거 조사, 최종변론의 순서로 1시간 20분 정도 변론이 진행되었고, 재판을 마친 이후에는 3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학생들이 재판을 관심있게 지켜봤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안의 쟁점이나 증거의 신빙성 또는 효용적인 증거 방법과 관련한 심도있는 질의가 계속 이어졌다. 학생들의 질문 중에는 "재판부에서는 소송대리인이 제시한 증거 중 어떤 증거를 보고 혹 갔느냐?"라며 재판부의 의증을 떠보는 참신한 질문도 있었다.

전남대 로스쿨 원장님과 교수님들은 학생들에게 실무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은데 법원에서 학교까지 찾아와 재판을 실제로 방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이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격려해 주셨다. 그리고 '찾아가는 법정'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셨다. 미

국 주대법원이나 항소법원 등은 실무교육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로스쿨에서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우리 사법부도 '찾아가는 법정'에 대해 여러가지 형태를 고민하고 시도해 예비 법조인의 실무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신뢰를 얻고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으로 일반 대중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찾아가는 법정'을 준비하면서 부담감도 없지 않았지만 법정이라는 닫힌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재판을 할 때에는 간과하기 쉬운 투명한 재판과 공개 재판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됐고, 재판부 구성원과 소송대리인들의 협조, 상호작용이 있어야 재판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시 법원으로 돌아오면서 '찾아가는 법정'에 들어는 시간과 노력만큼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직접 찾아오는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배려를 위한 노력을 잊지 말고 실천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불법이 완전한 4월 마지막 날 젊음과 낭만이 가득한 캠퍼스에서 열린 법정은 웃음과 활기가 있었다. 실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캠퍼스에 간 재판부는 오히려 학생들의 열정과 희망찬 기운을 마음속에 담아 올 수 있었다.

기고



김규하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전남도교육청 과장

세 정부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2016년까지 모든 중학교에 전면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자유학기제는 과도한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교육 공약이다.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 동안 지필평가(종간·기말고사)를 치르지 않으며, 학생들이 저마다 타고난 소질과 끼를 풀어나가 열정적으로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학교교육 전반을 토론·실습·체험 등 다양한 자율적 체험활동으로 학기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세 정부는 그간 우리 교육이 지닌 다양한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는 반성적 고찰과 더불어 행복하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게 됐다. 특히 중학교에 도입한 배경은 학생들이 가장 목적의식 없이 학교를 다니는 시기가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의 실현 '자유학기제'

는 점과 자기 관리 능력 개발을 자극하는 데 가장 적절한 시기라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입시 준비에 바쁜 고등학교 단계에 비해볼 때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2016년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을 목표로 올해부터 전남지역 3개교(완도 청산중, 화순 동명중, 순천 이수중)를 비롯해 전국 42개교에 연구학교를 운영한다. 이들 연구학교를 통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학력 저하·사교육 기승 등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 2009 개정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개선, 진로탐색 및 인성교육 충실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자유학기제가 지향하는 교육적 목적과 취지는 모든 국민이 희망하는 교육과 일치하기 때문에 성공적 정착에 대해 많은 기대를 안고 있다.

이에 자유학기제 성공적 실행을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및 유연성을 강화하고, 핵심 성취기준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체험학습 중심의 과목 시수를 늘려야 하고, 체험학습 강조로 인한 학업성취도 저하 예방을 위해 반드시 도달해야 할 핵심 성취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수·학

습 방법 개발과 결과·과정을 동시에 강조하는 평가방식을 개발해 활용해야 한다. 토론·실습·체험학습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블러터인 운영과 같은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적용이 전제돼야 한다. 또 교사의 평가 기록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상시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1학생 1스포츠 동아리, 1학생 1예술 동아리 활동 등으로 체육·예술 등 감성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넷째, 진로교육 프로그램 내실화로 학생의 진로설계를 지원해야 할 것이며, 학생들이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 고등학교 입시 제도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유학기 실시 후 학교는 종전의 입시교육으로 화귀될 가능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자유학기의 남은 시간에 입시 준비를 위한 사교육으로 몰려갈 우려도 있다. 따라서 자유학기에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 포트폴리오 등을 고등학교 입시와 연계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자유학기제가 튼튼하게 학교 현장에 뿌리 내려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학생들은 진로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사고력·협업능력·공감능력을 함양해 행복한 미래생활을 설계해 나갈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희망하는 교육시스템의 변화를 위해 관심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헌정의 뜨거운 열정을 기대한다.

無等鼓

일본 오사카 인근 도시 타카라즈카에 가면 만화가 데즈카 오사무 기념 박물관이 있다. '밀림의 왕자 레오', '리본 기사' 등 어린 시절 TV와 만화에서 보았던 캐릭터들이 반기는 박물관에 들어서면 마음이 절로 행복해진다.

이곳의 명물은 뽀니뽀니해도 '철완 아톰', 박물관 구석구석에 자리한 아톰의 흔적을 찾아가다보면 어느덧 추억에 빠져든다. 1952년 탄생한 아톰 캐릭터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일본에는 유명 캐릭터들이 많다. '스누피'에 대한 향해 만든 '헬로 키티' (1975년)가 대표적이다. 키티는 어릴 때부터 키티 캐릭터 상품을 모았던 빌 게이츠가 6초 원을 제시, 디지털 판권을 구매하려 했으나 제작사가 거절했던 일화로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다.

아기공룡 '둘리'가 서른번째 생일을 맞아 만난 '헬로 키티'가 대표적이다. 키티는 어릴 때부터 키티 캐릭터 상품을 모았던 빌 게이츠가 6초 원을 제시, 디지털 판권을 구매하려 했으나 제작사가 거절했던 일화로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다.

아기공룡 '둘리'가 서른번째 생일을 맞아 만난 '헬로 키티'가 대표적이다. 키티는 어릴 때부터 키티 캐릭터 상품을 모았던 빌 게이츠가 6초 원을 제시, 디지털 판권을 구매하려 했으나 제작사가 거절했던 일화로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다.

'둘리 아빠' 김수정 화백은 '아이는 아이다워야 한다'는 전제 아래, 때로는 버릇없고 반항적인 행동까지 그려보려 했

었다. 하지만 교과서적인 것만 강조하던 당시 사진 심의를 통과하기엔 무리였고, 결국 공룡을 의인화해 이야기를 풀어내었다.

둘리를 비롯해 간파빠아 별에서 온 도우미, 둘리의 천적 고길동, 서커스단에서 탈주한 타조 토치, 가수 지망생 마이콜, 핏족자를 물고 다니는 히동이까지 다양한 캐릭터는 많은 사랑을 받았다.

2003년엔 부천 시에서 '둘리(杜里)'라는 이름으로 주민등록증(830422-1185600)도 발급받았다. 잠시 주춤했던 둘리가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올 겨울방학엔 극장용 애니메이션 '방부제 소녀들의 지구 대침공'이 개봉한다. 2015년에는 서울에 둘리박물관도 오픈한다.

둘리 만화와 캐릭터 상품을 열심히 모았던 오랜 팬으로, 소식을 듣고 자넨던 오랜 친구가 돌아온 듯해 반갑다. 패자가 된 후 김수정씨를 인터뷰 하던 때의 흥분도 새록 새록 떠오른다. 토종 캐릭터의 자존심, '둘리'를 응원한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kwangju.co.kr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浩榮**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건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지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